

종합

BMW로 표심 잡아라

(Bicycle·Metro·Walking)

지방선거 출마자들 친환경 선거운동 논길

자전거·대중 교통·도보로 친밀감 높이기

‘선거운동도 이제 친환경이 대세’ 6·2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상당수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전거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하는 등 친환경 선거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유권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데다 저탄소 녹색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시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예비후보 상당수가 친환경 선거운동을 선호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선거운동원들과 골목골목을 누비며 자신을 알리는 가 하면 버스를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유권자 접촉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농촌지역 출마 예정자들은 도보로 논밭을 직접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마디로 BMW, 자전거(Bicycle)와

지하철(Metro), 도보(Walking)를 활용한 친환경 선거운동이다.

19일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은 자전거 10여 대를 마련해 선거운동원들과 어깨띠를 두르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민심을 얻으려 한다. 또한, 금남로 1가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한 이동을 통해 시민들과 접촉을 높여갈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정동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주말과 휴일에는 무등산, 금당산 등 광주 시내 주요 산을 오르며 등산객과의 접촉을 넓히고 있으며, 지하철 농성역 인근이 선거 사무실이라는 점을 최대한 이용해 지하철 이동 횟수도 늘려가고 있다. 특히 정 후보 측은 선거운동원들과 이동할 경우 2~3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주

차문제 해결과 탄소배출도 줄일 겸 9인승 또는 12인승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11월에는 정찬용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들과 걸어서 광주 시내 전역을 도는 체험행사 등을 갖기도 했다. 이형석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북구 광역 선거구가 6개인 점을 감안해 6개 거점을 정해 놓고 도보를 통해 지역구 곳곳을 누빌 계획이다.

이밖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예비후보 상당수도 지역구가 넓지 않은 만큼 앞으로 선거운동 방향을 자전거와 도보, 여기에 경차까지 동원해 유권자 접촉을 넓히고 민심을 쟁길 예정이다. 남씨가 풀리면 이 같은 선거운동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선거운동에 ‘BMW’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시간 동안 유권자들을 통해 지역 의 민심과 현안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DJ 남긴 재산 12억 6천만원

상속세 538만원 납부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상속한 순재산은 12억여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관할 마포세무서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서 총재산을 13억7천500만원, 부채를 1억1천100만원으로 신고한 뒤 상속세 538만원을 납부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채는 자서전 집필 비용 등으로 알려졌다. 순재산은 총 재산에서 채무를 뺀 12억6천400만원으로, 이중 8억원은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나머지 4억6천400만원은 홍일·홍연·홍길씨 등 아들에게 각각 상속됐다. 이 여사가 상속받은 8억원은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잇는 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고한 순재산은 모두 예금재산이며, 부동산은 없다고 김 전 대통령 측은 전했다. 동고동 저자는 이 여사 소유로 돼 있어 이번 상속재산 신고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시설

러시아서 어학연수 중 테러로 숨졌다니

러시아 알타이 국립 사범대에 단기 어학연수 중 광주교육대 2학년 강모(22)씨가 현지 청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르쿠츠크 주재 한국총영사관 측은 지난 15일 이르쿠츠크 바르나울시에서 강씨가 청년 3명에게 흉기 등으로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18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 3명을 붙잡아 범행 동기를 캐고 있지만 급부를 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국인 을 대상으로 한 인종 혐오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총영사관 측은 따르면 우리 유학생들이 극우민족주의자 또는 인종 혐오주의자들의 표적이 된 것은 이번 만이 아니라고 한다. 러시아에서는 지난해 인종 혐오 범죄로 숨진 사람이 71명, 2008년에는 110명에 달한다. 광주교대가 이던 현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어학연수단을 파견했는지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사건에 이르렀던 상황은 보편적 위험의 준비가 너무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판단이 든다.

남녀 학생들을 20명이나, 그것도 처음으로 보내면서 담당 직원에게 알타이 대학까지 인솔토록 한 뒤 바로 귀국하게 한 것은 이후 학생 관리를 현지 대학에 맡긴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된다. 강씨가 집단 테러를 당한 시각이 밤 8시라는 사실은 학생들 관리가 전혀 안됐다는 이야기다.

이번 사건은 대학생들의 해외연수나 봉사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현지에서 적응을 못하고 충돌적 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학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국세청 ‘호남기업 손보기’ 의혹 해소해야

최근 이 지역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국세청의 ‘호남기업 손보기’ 의혹이 국회에서조차 제기돼 그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중에 국세청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시절 재미를 본 호남기업들을 손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고 국세청장에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호남 인맥들이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속아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대형 건설사 3곳에 대해 교차 세무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기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그것도 동시에 받게 된 것은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 의도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시중에 떠돌 수밖에 없었다.

물론 국세청장은 “특정지역과 특정기업에 세무조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우리도 이 해명이 사실이었을 바리다. 하지만, 여당원들이 나서 정치적 의도를 제기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세무조사의 동기나 시점 등이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건설 경기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 때 동시 세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했는지, 그 시점이 적절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일련의 세무조사가 ‘호남기업 죽이기’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만큼 설득력있는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의도에 비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서 냉혹한 심판 받을 것”

광주시의회 ‘선거구 분할’ 강행 후폭풍

민주당 일색인 광주시의회가 경찰력까지 동원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내용의 기초의원 정수 조례안을 의장 직권 상정으로 강행하려 하면서 역풍을 맞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진보 정당이 일제히 4인 선거구 분할에 찬성한 시의원 전원과 민주당의 공천 배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 필승카드를 추진하고 있는 야권 연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시의회의 4인 선거구 분할 강행 처리를 두고 당내와 지역정계에서도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화와 혁신’을 화두로 내세웠지만, 결국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영남 패권과 일방적 의회 운영을 비판하면서 가득된 포기와 정당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 스스로 텃밭인 호남에서 패권으로 고착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내, 특히 전국 정당화를 염원하는 수도권과 비호남 지역 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자들 사이에 격앙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한 수도권 재선거 분할에 찬성한 시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진보 신당도 일제히 논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滄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2-8005>	문 회 회 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문 화 생 활 부 2200-661 <F A X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여 론 제 작 부 2200-679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63	체 육 팀 2200-663 <F A X 02-773-9335>		
사 회 2 부 2200-627 사 진 부 2200-691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규격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사퇴 하루전 무리한 인사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하기 하루 전인 18일, 무리한 인사를 단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는 지난해에 이어 40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측근들을 승진시키고 인사 관련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광주시 광산구청에 따르면, 전 전 구청장은 지난 1월 8일 승진 15명, 전보 40명 등 모두 320명에 이르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뒤 지난 18일자로 또다시 승진 12명, 전보 62명 등 7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에서는 청장 비서실장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켜 다시 비서실장으로 발령했으며, 사무관 승진자 2명 중 1명도 전 청장의 측근 인사로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6개월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 1월 인사대상으로 포함됐던 직원 6명을 한 달여 만에 다른 자리로 발령했다.

한편 전갑길 전 구청장은 19일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이날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중부취재본부=기원대기자 wtkeee@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등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9일 광주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1층 사무실에서 광주시의원 및 북구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입지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선거전 본격화

광주·전남 첫 날 207명

오는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주·전남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구의원 등의 예비후보 등록이 19일 시작되면서 지방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접화했다.

이날 광주와 전남지역 일선 선관위에는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 총 207명(광주 71명·전남 13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이들은 등록 후 일제히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가 명함을 돌리며 지지소에 나서는 등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광주시 선관위 집계 따르면 이날 정재훈 동아병원장과 유재신 전 광주시의원 등이 각각 남구청장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

하는 등 15명이 일선 선관위에 기초단체장 후보로 등록했다.

이 가운데 광산구청장 선거 등록 예비후보자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청장 예비후보로는 김선옥 전 광주시의원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이날 등록을 마쳤다. 또 시의원 예비후보로는 이명자·양혜령 광주시의원 등 27명이 등록했으며, 구의원 29명 등 총 7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남은 이날 목포와 여수·순천·광양·나주 시장 등 5개 시장 선거에 15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으며, 도의원 54명, 시의원 67명 등 총 136명이 등록했다.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설 ▲유급 사 무원 선임 ▲홍보발 불출 ▲명함 배부 ▲어깨

띠 착용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 예비후보는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컴퓨터를 이용한 휴대전화 집단 문자 메시지를 5차례까지 보낼 수 있다. 전남지역 군수와 군의원은 3월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각 정당들도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 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0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장 사무실에서 김동철 시장 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장 및 5개 구청장 경선방법과 공천심사위 구성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선거체제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령인구 46년만에 1천만명선 붕괴

올 990만 1천명...작년보다 16만 1천명 감소

198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 현상이 심화된 여파로 올해 학령인구가 1천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통계청 추계인구에 따르면 올해 학령인구는 990만1천명으로 전년(1천6만2천명)보다 16만1천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는 초등·중등·대학교에 다닐 연령대인 만 6세에서 21세까지 인구를 말한다.

학령인구가 1천만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경제개발 시기에 1964년(992만5천명) 이후 46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학령인구는 ‘베이비 붐’에 힘입어 1965년 1천40만3천명으로 1천만명을 넘어서 뒤 1980년 1천440만1천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핵가

족화와 가족계획의 영향에 따라 줄어들기 시작해 2003년 1천92만9천명으로 1천만명대로 내려앉았다.

문제는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는 점. 2015년에는 872만8천명으로 800만명대로 낮아지고, 2018년 700만명대(791만4천명), 2022년 600만명대(699만5천명)로 각각 감소한다. 또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7년에는 올해의 절반 수준인 494만5천명에 불과하다.

학교별로 초등학교 학령인만 6~11세 인구는 이미 2002년(419만1천명)을 기점으로 줄어들어 올해 329만7천명으로 감소하고 2년 후인 2012년에는 300만명 선도 무너질 것으로 추계됐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이럴 때마다 초라해 지는 게 있다